

#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통일후 관리 방안

이용범 / 한국토지공사 북한사업단 과장

## 머리말: 문제의 배경

**1991** 재 국토 면적의 65%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악 국가라고 불릴 만큼 산림 면적의 비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적 토지 수요의 급증으로 국토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자원의 하나로서 산지의 이용은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산지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만을 위한 장소라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의 공급원, 국민 휴식 공간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적·공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토지 공급원으로서의 다양한 산지 이용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연간 약 34조 원(1996년 현재)에 이른다는 산림청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토의 3/4인 73.4%가 산지로 구성될 통일시대의 산지에 대하여도 단순히 임목이 생육하는 토지라는 가치외에, 다양한 환경재 또는 공공

재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산림 자원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산림은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의 주 원인이 산림의 황폐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을 살펴보고, 통일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국토 이용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 북한의 산림 자원

### 산림 자원의 분포

북한은 매우 풍부한 자연 자원과 우수한 생태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지형은 장기간 거듭된 지반 운동과 침식·유적 작용

등으로 산지, 평야, 계곡, 해안, 고원 등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동고서저의 형세로 북한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산이 많고 수평적·수직적 기후가 다양한 북한의 산림에는 식물의 분포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식물의 종적 구성은 3,064종(변종을 포함하면 4,118종), 양치 식물이 약 200종, 이끼 식물이 약 600종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 산림수종은 84과 269속 1,098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喬木만 해도 침엽수 19종, 활엽수 136종, 대나무 3종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sup> 대부분의 침엽수림은 주로 압록강 상류인 자강도 일대와 두만강 상류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활엽수림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산림대는 크게 한대림·온대림(북부·중부·남부)·난대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의 산림대는 한대림·북부온대림·중부온대림에 속한다. 황해남북도·함남중부·평남중부권인 중부온대림에는 소나무, 신갈나무, 때죽나무 등의 혼효림이 많으며, 특징 수종으로는 신갈나무, 소나무, 향나무,

젓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으며, 온대중부 이북 지역인 온대북부림에는 피나무·박달나무·신갈나무·젓나무 혼효림과 소나무 순림이 많이 존재한다. 한대림은 연평균 기온이 5℃ 미만인 평안남도·함경남북도의 고원 및 고산지대에 분포하며, 원시 침엽수림이 파괴되고 자작나무, 사시나무, 황철나무, 느릅나무 등의 활엽수 또는 혼효림, 잎갈나무 순림 등이 많다.

해발고에 따른 수종 분포에 의하면, 고산지대에는 분비나무, 젓나무, 낙엽송, 소나무,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가래나무 등 침엽수가 주로 생육하고 있으며, 중산간지대에는 참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황철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등으로 침·활엽수가 혼재되어 있으며, 저산간지대에는 대추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개살구나무, 신갈나무, 포플러,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가 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산림 현황과 황폐화 원인

북한의 토지법에서는 산지를 '산림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예정인 산야와 그 내부의 각종 이용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관리는 국토 관리

1) 김운근·서승진·김정봉(1994),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6~12.

기관과 토지를 이용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가 담당하며 이들은 산림의 남벌과 화전 개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 이용 관리 및 감독은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 하에 국가 관리 기관이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휴경, 타용도 전용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연 여건상 농경지 확장과 산업 용지, 주거 용지 등의 수요는 제한적인 간석지 개발 이외에 주로 산지의 타용도 전환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토지 이용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특히, 북한은 50년대부터는 야산 개간을 통하여 경작지·과수원·뽕나무밭의 확대 등 농업 용지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산림의 상당 부분이 농업 용지로 전환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산림 면적은 북한 토지 전체 면적인 1,240만 ha의 77%에 해당하는 약 950만 ha로 남한 산림 면적의 약 1.5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외에 논과 밭을 포함한 농경지가 200만 ha로 전체 면적의 16%

를 차지하고 있고, 약 50만 ha는 도시 용지, 나머지 50만 ha가 기타 용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sup> 북한 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지 면적이 국토 총면적의 약 80%라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60%가 해발 100~1,000 m 이내의 저산성 산지이며, 약 13%가 해발 1,000~2,000 m인 중산성 산지, 해발 2,000 m 이상의 산지가 0.26%, 나머지가 해발 100 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북한의 산림 면적에 대한 자료는 다른 분야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추정 자료간의 편차가 심각하여, 그 통계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sup>5)</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이 최근에 진행된 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북한 국토 면적 1,240만 ha 가운데 산림 면적은 약 68.1%인 845만 ha로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1.1%, 논 7.6%, 밭 11.6%, 초지 8.6% 등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산림 면적 940만 ha에 비하여 95만 ha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결과는 해발고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2) 김운근 외(1994), 전계서, p. 19.

3) 통계청(1997),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p. 43.

4) 통일원(1996), 「북한 경제 통계집」, p. 78와 통일원(1995), 「조선 중앙 연감」 p. 66에서 재인용.

5) 직간접적으로 추정된 북한의 산림 면적은 최소 630만 ha에서부터 최대 985만 ha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등을 감안해볼 때 통일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3년 현재 947.7만 ha는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하였다(김운근 외(1994), 전계서, p. 17).

〈표 1〉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토지 이용 현황

구분	산림	주거지	경지	초지	수역	기타	합계
면적(천 ha)	8,446	139	2,376	1,066	164	209	12,400
비율(%)	68.1	1.1	20.2	8.6	1.3	1.7	100

자료: 이승호(1997),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 자원 현황", 「임업정보」 제74호, 임업연구원, P. 47.

고 있다는 다른 연구 결과<sup>7)</sup>와 연계시켜볼 때, 실제적으로도 산림 면적의 많은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산림 면적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식량 증산을 위하여 추진된 이른바 '다락밭' 개간 사업과 협동농장의 연료림 채취를 들고 있다.

북한에서도 산림 면적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인지하여 정권 초기부터 조림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발표하는 조림 계획이나 조림 실적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조림 실적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조림 사업 직후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육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150만 정보의 조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림 조성을 목

표로 산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20만 정보 새땅 찾기운동, 다락밭만들기운동, 각종 건설 자재용 목재,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에 따른 땀감 확보를 위한 남벌 등의 영향으로 산림은 더욱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1995년과 1996년의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서남평야부의 평안남북 및 황해남북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의 다락밭 개발이 추진된 지역으로 해발 200 m까지 개간 사업이 추진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황폐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행정 구역별로 산림 면적과 임목 축적을 추정한 〈표 2〉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북한의 ha당 평균 축적은 남한의 43.1 m<sup>3</sup>보다 적은 40.6 m<sup>3</sup>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비교적 산림 면적률이 60% 이상인 지역이

6) 이승호(1997),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 자원 현황", 「임업정보」 제74호, 임업연구원, p. 47.

7) 홍수 피해가 컸던 황해북도 지역의 인공위성 자료에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발 200 m까지는 개간에 의하여 임목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해발 300 m 이상의 산림에서는 임목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되었다(김 전(1998), 「원격 탐사에 의한 북한 산림의 황폐화 현황」, 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 주최, 산림 환경의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표 2〉 북한의 지역별 산림 면적과 임목 축적

행정구역	면적(km <sup>2</sup> )	산림 면적		임목 축적		ha당 축적(m <sup>3</sup> )
		면적(천 ha)	비율(%)	축적(천 ha)	비율(%)	
평양	2,113	134.2	63.5	4,061	1.2	30.3
남포	829	24.3	29.3	738	0.2	30.4
개성	1,309	53.0	40.5	1,564	0.5	29.5
강원도	11,150	749.9	67.3	30,494	8.9	40.7
황해남도	8,294	477.2	57.5	13,217	3.9	27.7
황해북도	8,154	477.2	58.5	14,704	4.3	30.8
평안남도	12,383	690.7	55.8	21,878	6.4	31.7
평안북도	12,575	792.7	63.0	22,487	6.6	28.4
자강도	16,764	1,406.5	83.9	59,417	17.3	42.2
양강도	13,888	1,214.4	87.4	56,219	16.4	46.3
함경남도	18,558	1,361.6	73.4	64,478	18.8	47.4
함경북도	16,745	1,063.9	63.5	53,606	15.6	50.4
합계	122,762	8,445.5	-	342,864	100.0	40.6

자료: 엄형민(1994), 「북한의 국토 개발·도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이승호(1997), 전제서.

평균 축적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양강도·함경남북도 남한의 ha당 평균 임목 축적(43.1 ha)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3개 대도시와 남서부에 위치한 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의 임목 축적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홍수 피해가 심각했다고 알려진 황해남도의 경우는 ha당 임목 축적이 27.7 m<sup>3</sup>로 80년대초 남한의 임목 축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에 가장 큰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과 에너지 부족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들 수 있다. 특히, 식량 증산을 위한 농

업 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7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주체농법에 따른 밀식 재배와 다락밭 건설을 들 수 있다. 다락밭 건설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는 최근의 홍수 피해를 초래하여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락밭 건설은 각 시·군의 인민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주관하여 경사 18도 이하의 산림 및 가용 토지를 작물 생산 가능지로 개발한 것이다. 1985년 북한이 발표한 다락밭 개발 면적은 16만 7,000 ha로 알려지고 있으며, 80년대 중반까지는 뽕나무와 사과·밀원·식량 작물 생산에 이용하여 식량 증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sup> 그러나 다락밭에 토사 유출

8) 김운근(1997),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농업 분야 경제 협력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한세정책연구원 주최 남북경협 공개토론회, p. 83.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작물도 지력 요구도가 높은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고 농기계 사용의 한계와 비료 및 농약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극히 저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sup>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외에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가져온 다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무계획적인 연료림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총체적 외화 부족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인하여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임산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80년대 말부터는 구소련으로부터 공급되던 석유의 무상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난·기계작업의 곤란 등으로 임업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었다. 지역별로도 도시 지역과 도시 근교 농촌의 협동농장은 임산 연료 75%, 기타 농산부산물 20%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간이나 일반 농촌 지역에서는 95% 이상을 임산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이상과 같이 북한 산림의 황폐화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북한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가장 핵심

적인 분야로 산림 자원의 관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통일의 여부와 관계없이 후손을 위한 쾌적한 국토 공간의 계승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통일 전이라도 대안 마련을 위한 남북한 협력이 시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통일과 산림 자원의 관리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77%를 점유하는 약 940만 ha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 후에는 북한의 산림 면적만으로도 통일 한반도의 산림 면적의 60.5%를 차지하는 엄청난 자원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대한 면적의 북한 산림 황폐 지역의 복구나 관리 문제는 단순히 북한만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사안이 아니라 향후 통일 한반도를 가정할 때 통일 한국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국토 환경의 조성 측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임목을 생산하는 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한 번 황폐화된 임지를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산림 자원의 관리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9) 히라타 류타로(1997), 「북한의 농업 기반 실태와 국제 협력 방안」, 농어촌진흥공사 주최 북한 농업 기반 국제 세미나 자료집, pp. 53~58.

10) 이광원(1997), 「북한 황폐 산림 실태와 복구 대책」, 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 주최 통일과 한국 임업 세미나 자료집, pp. 51~53.

통일 한반도의 효율적인 산림 자원 이용과 관리 방안을 크게 임업 생산적 측면·공공 경제적 측면·토지 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 임업 생산적 측면

산지의 본래 기능인 목재 생산 기능과 관련된 사항이다. 구 동서독의 통일후 구동독 지역의 개발과 구 동서독 경제 통합에 따른 목재 수요 증가로 통일후 5년간 목재 수요가 2.3 배나 증가하였으며, 목재 수입량도 3.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통일 직후 5년간은 베트남 목재 수출량이 2.3 배나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 목재 수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1)</sup> 이는 통일 이후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불합리하게 추진되었던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현황이나 각종 주택 및 산업단지의 실정 등에 비추어볼 때, 통일후 북한 지역의 경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연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대량의 목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임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경우, 목재 생산에 대한 기대가 급증할 것이며, 북한 지역의 임업 환경을 감안해볼 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업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자원 보호 정책 추진에 대비한 방안의 마련과 함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급 계획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나, 기후적 특성이 동남아 국가와 다르며 자본 회임 기간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장기간인 임업의 특성상 공공 부문에서의 주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집약적 임업 생산이 가능하며 사업성 확보에 무리가 없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적정한 경사도를 지닌 양호한 산지를 확보하여 관리·운영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공공 경제적 측면

환경과 연계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사항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경제 발전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급증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산지 이용의 중요

11) 이광원(1996), 「통일 이후 산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20~22.

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 및 각종 공해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그리고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휴양 및 레저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열악해짐에 따라 수자원 및 대기 자원의 정화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황폐화로 인하여 국토 환경이 열악해진 북한 지역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림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통일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 측면에서 협력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60년대에 추진하였던 남한의 산림 녹화 및 사방 사업의 경험과 기술, 북한의 정선된 노동력을 결합하여 산림의 복구 및 자원화 사업에 참여한다면, 쾌적한 국토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개선 비용을 절감하여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 복구 사업은 홍수 조절 기능과 같은 산림의 수원 함양 기능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북한 농업 구조 개선 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국토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토지 이용적 측면

도시적 용도 토지의 수요 급증에 따른 토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가용 토지 자원의 한정으로 심각한 토지의 편중과 투기로 인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고, 국토 이용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생태적으로 양호한 많은 산림이 훼손을 입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 정책에서는 주로 농지가 포함된 자연 녹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식량 생산의 감소를 우려하고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지와 구릉지를 이용한 개발의 모색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자연 친화적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 사업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법의 개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인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 산지가 주택지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며, 공해 산업보다는 환경 친화적 산업의 유치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형태의 산지 이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 직면하게 될 토지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칫 준농림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인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한 용지 확보에 많은 산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는 관점에서 토지제도의 개편 및 토지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통일은 그동안 분단으로 이질화되었던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생활의 터전이 되는 국토 환경은 분단으로 왜곡되었던 이용체계를 바로 잡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산림 자원은 효율적인 국토 이용 측면에서 종합적인 이용체계와 관리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산지는 목재 생산은 물론 관광·휴양 자원,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방대한 자원임과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으로의 활용이 가능하여 북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경제적 측면, 공공 경제적 측면, 토지 이용적 측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산림은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산림 자원의 복구가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 자원의 복구는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의 산업화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면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남북 상호간이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전에 용이한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라는 공간은 현 세대에서만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는 쾌적한 국토 공간을 후대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통일에 대비하여 국토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산지에 대하여도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측면에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統**